

의안번호	제 117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4. 30. (제 8 차)

의
결
사
항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4. 4. 30.

1. 의결주문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12.6. ~ 12.10. 기간 중 실시한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및 처리 위탁 절차를 위반한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 1)

-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52조(과태료)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금융감독원 제8차 제재심의위원회(2024.3.26.) 심의필
- 2024년 제8차 안전검토소위원회(2024.4.25.) 심의필

<별지>

한화생명보험(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조치대상 : 한화생명보험(주)

○ 과태료 32백만원 부과

2. 조치사유

가.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이하 '자회사 GA')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

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제3자(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21.4.1. 자회사 GA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자회사 GA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

(붙임 1)

관 계 법 규

1. 신용정보법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③ ~ ⑦ < 생 략 >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과태료) ① <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 생 략 >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 8. < 생 략 >

③ ~ ⑦ < 생 략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4,000만원
더.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2항제3호	4,000만원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제20조 관련)

Ⅱ.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 접근통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 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라 한다)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Ⅲ. 관리적 보안대책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 구분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록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별표 4의2] 신용정보 관리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관리기준
1. 신용정보 처리기준	1.5. 신용정보의 제공	1.5.1. 신용정보의 제공계약	-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신용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3을 적용
2.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2.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2.1.1.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업무	-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업무 - 별표 3의 관리적 보안대책에서 정하는 업무 - 정보유출 대응매뉴얼(contingency plan) 마련 - 관리적 보안대책 시행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에 필요한 조치

2. 검사 및 제재 관련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관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 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자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로서 직원이 주된 행위자인 경우에는 임원등을 조치(함께 조치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한 후에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붙임 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4.00.00.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 과태료 32백만원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2명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등

(1)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위반

-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소속 임직원 모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용 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한화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2021.4.1.~2021.6.30. 기간 중 회사의 신용 정보전산시스템에서 회사 전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이하 '자회사 GA')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업무에 관계없이 일괄 부여 하여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짜, 정보의 항목, 사유와 근거 등 개인 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1.4.1.~'21.12.10. 기간 중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 개인신용 정보를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이용한 사유와 근거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총 3,366건의 신용정보 대한 업무처리기록 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을 통한 제공 절차 위반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 회사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은 제3자(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 관리 대책을 위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2021.4.1.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에게 보험계약자의 생존제지급금 신청 등에 대해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회사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간의 위탁계약서에 보안대책 마련에 필요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보안관리약정 체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52조(과태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보험과	보험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945	02-3145-7789